

제국일본의 권력과 신문*

- 1920년대 후반부터 1935년경까지를 중심으로 -

송석원**

j60w0178@khu.ac.kr

Contents

- I. 머리말
- II. 공기(公器)로서의 신문과 권력
- III. 권력에 동조하는 신문과 전쟁
- IV. 맺음말

Abstract

本研究は、戦争を通じて国家構想を実現せんとした帝国日本の戦時体制のなかにおける新聞のあり方を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戦時体制が強化されてゆくことにつれて国家権力は新聞に対してあらゆる弾圧を加え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実質的には新聞の発行部数が急激に増大される現状に対してその裏に作用する言論の二つの側面、すなわち真実を報道する公器としての側面と、激しい競争に露出されて営業上の利益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経営主体としての側面から分析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ただ単に、言論弾圧が強制され、それによって仕方なく言論が帝国に同調していったという説明だけでは同じ権力への同調ではあるものの、そのあいだで発見される微細な差異の原因と結果を正しく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であろう。言論機関から宣伝機関に成り下がった新聞を取り上げ、「新聞と戦争」の問題を考え直してみたい。

Key Words : 帝国日本、新聞、言論自由、言論弾圧、新聞法

(the Japanese Empire, newspaper, freedom of press, suppression of the press, press law)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0702).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정치학 전공.

I. 머리말

일본에서 창간된 최초의 신문은 나가사키(長崎)에서 1861년 6월에 창간된 영자지 *The Nagasaki shippinglist and advertiser*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요코하마에서 *Japan Herald*가 창간되었다. 이로써 일본에서도 신문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수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앞의 두 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초기 신문은 도쿄 이외의 지역에서, 영어로 창간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초기의 신문이 일본인을 독자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분주하던 외국인(과 지극히 한정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일본어 신문은 이보다 훨씬 뒤늦은 1871년에 창간된 『요코하마마이니치신문(横浜毎日新聞)』이다. 이후 다양한 신문이 창간과 폐간을 반복하며 일종의 ‘신문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대내외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무엇보다도 근대국민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여 서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서구, 근대, 문명, 국가, 국민 등의 키워드가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은 신문이 활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내셔널리즘에 대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에른스트 겔너(Ernest Gellner)²⁾ 등의 논의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일본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민의 형성과정에 신문은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³⁾ 원래, 신문은 언론기관으로서 민의를 창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데에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사회의 국민 탄생이 상당 수준의 식자율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활자 미디어로서의 초기 일본 신문은 이러한 신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

1) 당시 일본인의 일본어 해독능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영어 역시 지극히 한정된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전혀 낯선 외국어였기 때문이다.

2) Anderson, Benedict(1983)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Gellner, Ernest(1983)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3)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송석원(2010) 「신문에서 보는 제국일본의 국가이상 : 메이지 시대를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제31호), 현대일본학회, pp.147-149 참조.

제로써 일반인들이 읽기 쉬운 문체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이른바 독서국민(讀書國民)의 탄생⁴⁾ 과정에서 신문이 보여준 역할이 궁극적으로 발행부수 증대를 통한 영업이익의 확보라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신문의 그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국가(정부)가 담당해야 할 기능에 일조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신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하였다. 물론, 신문은 태생적인 사명으로서 권력 비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는 신문에 대한 간섭과 탄압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입법과정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제국일본의 신문은 일반인의 식자율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점차 확대, 확장해갔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의 전쟁은 신문 성장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사실, 이들 양 전쟁 당시의 신문과 권력의 관계를 보면, 전쟁이 얼마나 신문으로 하여금 국가주의의 입장에 서게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전쟁은 신문의 발행부수를 증대시키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신문을 불가피하게 국가주의적 입장으로 통일시켜 가는 전기(轉機)이기도 했다. 특파원들에 의한 전쟁 속보 보도는 그 자체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국면마다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데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신문은 국민 형성과 전쟁 수행이라는 국가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는 확실히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형성기를 지나 메이지(明治)와 다이쇼(大正)를 거쳐 쇼와(昭和)에 이르러 초국가주의적 파시즘체제가 형성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신문은 점차 언론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곧 국가권력과 군부, 우익, 폭력에 대한 신문의 항복을 의미했다. 권력과 폭력에 굴복한 신문은 더 이상 언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단순한 선전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메이지에서 쇼와 전반기(1945년까지)에 이르기까지의 신문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언론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와 권력으로부터의 언론탄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신문은 점차 자유를 상실하고 탄압을 수용하여 권력에 동조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 군부, 우익,

4)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永嶺重敏(2004)『<讀書國民>の誕生：明治30年代の活字メディアと讀書文化』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참조.

폭력 앞에 언론의 자유가 설 자리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시체제 속에서 언론사 스스로 자기규율을 강화해간 결과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 시기의 신문이 군국 일본의 대륙 침략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적법성 등에 대한 이성적인 논의의 장이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침략을 기정사실화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결과적으로 국수적이고 침략적인 내셔널리즘을 신문 스스로가 고무하는 감정적, 감각적 분출구의 장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신문의 전쟁책임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신문은 스스로의 전전(戰前) 혹은 전중(戰中)을 총괄하지 않은 채(비록 있다 하더라도 책임문제는 비켜가는 형태로) 전후를 맞이하여 여전히 언로(言路)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신문과 전쟁’이라는 주제는 오래되었으면서도 새로운 주제이다. 이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전쟁을 보도하는 신문의 보도 프레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 더욱이 전쟁을 속보 뉴스로 보도하는 것을 넘어 현장중계까지 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전쟁을 보도하는 신문과 방송 영상은 전쟁 그 자체의 시비와는 무관하게 전쟁에 사용된 첨단무기에 대한 예찬 혹은 비판, 전쟁에 따르기 마련인 영웅 만들기 등에 집중되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기조차 하다. 자국이 수행하는 전쟁을 정전(正戰)이라고 규정하는 한, 그러한 전쟁을 보도하는 신문은 필연적으로 국수적 내셔널리즘을 고양하는 프레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⁵⁾ 이러한 점은 제국일본의 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국일본의 신문 연구는 『이와나미 강좌 『제국일본』의 학지 : 제4권 미디어 속의 『제국』(岩波講座『帝国日本』の学知 : 第4巻 メディアのなかの『帝国』)』(2006)에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야마모토 다케토시(山本武利), 쓰치야 레이코(土屋礼子), 사사키 다카시(佐々木隆), 가토 데쓰로(加藤哲郎) 등의 연구자와 마에사카 도시유키(前坂俊之) 같은 신문기자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특히, 마에사카의 경우 전적으로 ‘전쟁과 신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의 이와나

5) 제국일본의 전쟁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정전(正戰)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민은 총단결, 총동원되어 국가적 과제에 임해야 한다는 점, 그러한 국가적 과제를 자기 자신에게 일체화한 사람만이 진정한 ‘국민’이라는 점, 따라서 모두가 총량한 국민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행위와 창작, 심지어 사고까지도 항상 국가를 정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이 국가권력에 의해 선전되고 강제되었다.

미 강좌 그룹의 경우에는 제국일본의 신문사 속에서 언론자유와 언론탄압 사이의 신문에 주목하면서 제국에 ‘동조’하는 신문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에서는 전시체제가 강화(전쟁)됨에 따라 그러한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신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탄압을 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문의 발행 부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에 대해 그 이면에 작용하는 언론의 두 측면, 즉 진실을 보도하는 공기(公器)로서의 측면과, 경쟁에 노출되어 영업상의 이익을 확보해야 할 경영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단지, 언론탄압이 강제되고 그에 따라 언론이 제국에 동조해갔다는 설명만으로는 똑같은 권력에의 동조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차이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제국일본의 신문은 권력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 권력에 동조하여 부수확대를 피하는 것 사이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설정에 의해서만이 당시 신문의 정확한 위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본격적으로 노정하기 시작한 시기, 즉 1920년대 후반부터 1935년경까지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공기(公器)로서의 신문과 권력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1945년 11월 7일 ‘국민과 함께(国民と共に立ち上る)’라는 선언을 게재하였다. 이 선언은 아사히신문이 전시보도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는 그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써 전쟁에 즈음해서 신문의 책임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문은 『아사히신문』과 같은 선언의 형태로 자신의 전쟁책임을 다 했다는 듯이, 그 후로는 전쟁과 신문에 대해 정면으로 논하는 일 따위는 없었다. 『아사히신문』의 선언 역시 군용기헌납운동 등과 같은 동사의 적극적인 전쟁협력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비록 전쟁과 신문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대체로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한 권력으로부터

터의 강제, 탄압 속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마에사카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국일본 시기의 신문은 군부나 정부에게는 피해자의 입장이었으나, 거꾸로 국민에게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있었다.⁶⁾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기(公器)로서의 신문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문의 언론자유 확보와 공공적 성격의 견지가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 보도로 시종일관하는 신문은 큰 위협으로 여겨졌다. 특히,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와 군부에게 신문은 언론기관이기보다는 선전기관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전쟁에 직면해서 신문이 언론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죽음까지도 각오한 철저한 저항이 불가피하게 요청되었다. 필요하다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신문사들이 협력하여 권력에 대항해야 한다. 그러나 제국일본의 신문은 전쟁의 격화 속에 밀려오는 권력의 강제와 탄압 앞에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여 싸우기보다는 각자도생의 형식으로 권력에 굴복하였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의 편집국장과 주필을 역임한 오가타 다케도라(緒方竹虎)는 다음과 같은 회한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군에서 보면, 신문이 하나가 되어 저항하는 것이 시종 가장 큰 위협이었다. 따라서 각 신문사가 정말로 손잡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도 다소 아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⁷⁾

그렇다면, 제국일본이 공기로서의 언론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며, 점차 언론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제국일본이 초국가주의적 파시즘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사실상 언론자유라는 용어는 사어(死語)에 가까웠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 언론자유를 운운할 수 있었던 시기와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단지 권력에의 동조만이 신문에 남겨진 유일한 기능이 된 경계의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신문사(新聞史)를 구획하는

6) 前坂俊之(1989) 『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p.22.

7) 電通編(1955) 『五十人の新聞人』電通、pp.206-207.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1925년부터 서서히 언론자유 영역이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후 만주사변을 계기로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군부의 움직임이 노골화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군과 황실 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간섭과 강제, 우익 등에 의한 폭력 행사 등이 점차 일상화되어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문·출판물의 발매반포금지 건수를 보면, 1932년과 193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34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34년 이후부터는 언론이 권력이나 폭력과의 전면적인 대결보다는 적절하게 타협하거나 스스로 자기규제하는 방법을 통해 권력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언론은 권력 및 폭력과의 대결 속에서의 ‘공포시대’를 넘어 권력에 봉사하는 ‘동조시대’를 열었다.

한편, 제국일본의 권력과 신문 사이의 관련 연표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신문지법(1909년), 치안유지법(1925년 공포, 1928년 개정), 국가총동원법(1938년) 등과 같은 법제 도적 정비를 하는 한편으로 내각정보부, 특별경찰(특고)과 같은 실질적인 실행 주체를 발족시키는 등 언론에의 간섭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준비해갔다. 먼저, 신문지법은 시사 관련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의 보증금 납부의무(제12조), 예심기사의 제한(제19조), 범죄를 선동하거나 곡해한 기사의 금지(제21조),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신문의 발매·반포(頒布) 금지(제23조), 육군·해군·외무의 각 장관에 의한 군사·외교에 관한 기사의 금지·제한권(제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언론자유를 크게 제약하였다. 특히, 제23조의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따위의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얼마든지 확대해석이 가능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더욱이 군부(육군 및 해군 장관)가 군사 관련 기사의 금지·제한권을 갖는 상황에서 신문의 언론자유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표 1〉 신문·출판물의 발매반포금지 건수(1926-1935)

년	안녕						
	총수	신문지법	출판법				
		신문지	단행본	출판 잡지	선전 인쇄물	도화	계
1926	412	251	39	35	84	3	161
1927	547	331	44	23	147	2	216
1928	829	345	58	29	397	-	484
1929	1,309	374	95	27	812	1	935
1930	2,171	504	154	50	1,456	7	1,667
1931	3,076	832	193	70	1,980	1	2,244
1932	4,945	2,081	217	227	2,420	-	2,864
1933	4,008	1,531	197	239	2,041	-	2,477
1934	1,300	587	75	73	565	-	713
1935	1,074	653	75	34	312	-	421

출처 : 内務省警報局『昭和十年中に於ける出版警察概観』, 前坂俊之(2007)『太平洋戦争と新聞』講談社, p.35에서 재인용.

또한, 치안유지법은 점차 격화되어가는 공산주의혁명 운동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1928년의 개정을 계기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체(황실)를 부정하는 일체의 언행을 금지하여 위반 시 엄벌하며,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위반자에 대한 중벌 부과와 단속 대상범위가 매우 넓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총동원법은 신문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외교뿐만 아니라 일반 치안과 재정금융에 관해서도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문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일본의 신문통제는 신문지법을 주선율로 하고 치안유지법과 국가총동원법 등을 보조선율로 하는 법적 장치를 통해 통제의 합법성을 확보하였으며, 여기에 특고, 군부, 우익 등의 폭력적 간섭이 더해졌다.

〈표 2〉 제국일본의 권력과 신문 사이의 관련 연표

연 도	내용
1909	신문지법(新聞紙法)
1925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공포
1926	교토(京都)학련사건에 첫 치안유지법 적용
1928	개정 치안유지법 공포, 전국 도부현(道府縣) 경찰부에 특별고등과 설치(특고경찰 발족)
1930	금수출해금, 런던해군군축조약 조인, 신문·통신 15사 언론압박 항의 공동선언
1931	만주사변(滿洲事變)
1932	상해(上海)사변, 만주국(滿洲國) 건국, '육탄 3용사의 노래' 당선작 발표(아사히신문), 5.15사건
1933	국제연맹 탈퇴, 고스톱사건, 다카가와(滝川)사건
1934	육군성 신문반이 「국방의 본의와 그 강화의 제창(國防の本意と其の強化の提唱)」팸플렛 발행
1935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천황기관설로 고발됨
1936	2.26사건
1937	노구교사건, 군용비행기현납운동 사고(社告) 게재(아사히신문), 내각정보부 발족, 중일전쟁, 남경(南京)사건
1938	국가총동원법 공포, 중일전쟁 성전박람회(오사카아사히신문), 전쟁미술전람회(도쿄아사히신문)
1939	국민징용령, 제2차 세계대전
1940	3국동맹(일본, 독일, 이탈리아), 대정익찬회, 기원 2600년 축하식
1941	일본신문연맹 발족, 신문공판제 실시,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 발발
1942	일본신문회 발족, 대일본언론보국회 발족
1943	나카노 세이코(中野正剛)의 '전시제상론'(아사히신문)으로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격노, 나카노 자살
1944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 개조사(改造社) 해산
1945	패전, 「국민과 함께(國民と共に立たん)」(아사히신문) 게재

출처 : 朝日新聞『新聞と戦争』取材班(2008) 『新聞と戦争』朝日新聞出版, pp.577-580에서 발췌하여 재정리.

이와 같이, 제국일본 정부는 신문의 언론자유를 보장할 의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신문 역시 권력에 쉽게 동조해감으로써 스스로의 언론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1930년의 신문·통신 15사 언론압박 항의 공동선언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사들이 연대한 마지막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제국일본은

전시체제를 새롭게 편성하기에 이르렀고, 국가적 과제로서의 전쟁 수행은 곧바로 군부의 발언권 강화를 결과함으로써 마침내 신문은 언론기관에서 선전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어 갔다.

태평양전쟁에 돌입한 시점에서 신문은 100% 군부, 정부의 선전기관에 지나지 않고, 이미 신문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언론의 자유와 진실을 지키는 경계는 15년 전쟁에서 보면 1931년의 만주사변이며, 아무리 늦어도 1932년의 5.15사건까지이다.⁸⁾

실제로, 만주사변 이후 군부는 정치의 전면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군부가 세력을 증진하기 시작하자, 내무성에서 육군의 위세를 빌려 헌병대와 우익, 폭력 단체는 결탁하게 된다.⁹⁾ 1932년의 5.15사건, 1933년의 고스톱사건, 1935년의 천황기관설사건, 1936년의 2.26사건 등은 군의 정치개입, 언론개입에 큰 이정표를 남긴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병사와 순사 사이에 일어난 지극히 우발적 사고인 고스톱(進止)사건의 처리과정과 이를 보도하는 신문의 논조는 군의 파위를 세상에 입증하는 결과가 되었다. 무단 횡단하는 병사를 순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병사와 순사의 충돌은 지극히 사소한 문제였고, 무단 횡단한 병사가 순사의 지적을 받아들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될 수 없었던 사안이었다. 더욱이 정당한 순사의 제지에 대해 병사가 저항하고, 군 수뇌가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 “황군 건설의 본의를 선명(宣明)하고 군인의 특수지위를 명징(明徵)”¹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언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은 스스로의 지위를 법 위에 위치시키고 있다. 만주에서 사건을 자작하여 꾸미고 이를 계기로 군대를 출동시켜 전선을 확대하는 등으로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일을 거듭해온 군은 고스톱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5.15사건, 2.26사건 등을 통해 국내 정치사회에서도 군의 특수지위를 명확히 하려 했다.

군인의 특수지위는 군과 전쟁 관련 기사에 현저히 반영되었다.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신문지법이 군사에 관한 기사에 대해 군이 금지·제한권을 갖고

8) 前坂俊之(1989)『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p.23.

9) 前坂俊之(1989)『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p.57.

10) 『大阪朝日新聞』一九三三年十一月二十日. 前坂俊之(1989)『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p.202에서 재인용.

있었기 때문에 군은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점차 무법적인 위치로 나아갔다. 이러한 군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문건 가운데 하나가 1934년 육군성 신문반이 발행한 『국방의 본의와 그 강화의 제창(國防の本意と其の強化の提唱)』¹¹⁾이라는 제목의 팜플렛이다. 육군이 주도하는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팜플렛은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군사과시증체제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군이 이러한 팜플렛을 발행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군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게재하도록 신문에 요청하였다는 점이다. 『아사히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이 이러한 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였고, 게재를 하지 않은 『아사히신문』은 이후 군과 심각한 갈등관계를 야기했다. 나아가 1935년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가 천황기관설로 고발되는 데에도 위 팜플렛에 대한 미노베의 통렬한 비판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¹²⁾

193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노골화되어 간 이른바 ‘사상국방(思想國防)’¹³⁾이라는 기치 아래 천황제 국체에 반하는 일체의 사상적 경향, 즉 마르크스주의는 물론 자유주의, 허무주의, 일본낭만파, 아나키즘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상이 공공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천황제 국체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전향’¹⁴⁾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갔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에 근거하여 용서 없는 탄압이 가해졌다. 예컨대, 교토대학 법학부 다키가와 유키토키(滝川幸辰)의 형법 관련 저서와 강연내용이 위협사상으로 간주되어 고발된 다키가와사건은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관련

11) 陸軍省新聞班編(1934)『国防の本意と其の強化の提唱』陸軍省新聞班.

12) 미노베는 『중앙공론(中央公論)』의 1935년 11월호 특집『육군국책 총비판(陸軍國策の總批判)』에 『육군발표의 국방론을 읽는다(陸軍発表の國防論を読む)』라는 글을 게재하여 군을 비판하였다. 미노베에 대한 군의 곱지 않은 시선은 이로써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 荻野富士夫(2000)『思想検事』岩波書店, pp.133-178 참조.

14) 전향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송석원(2007) 『일본에 있어서의 전향(轉向)의 정치학: 그 유형과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제11권 2호), 국제지역학회, pp.674-697.; 전상숙(2005) 『일제 파시즘기 사상통제정책과 전향』 『한국정치학회보』(39집 3호), 한국정치학회.; 혼다 슈우고(1993) 『전향문학론』 『1930년대 문학연구』, 현대문학연구회 편. 평민사.; 磯田光一(1968) 『増補 比較轉向論序説: ロマン主義の精神形態』 勁草書房.; 吉本隆明(1958) 『轉向論』 『吉本隆明全著作集 13』 勁草書房.; 鶴見俊輔(1959, 1960, 1962) 『共同研究 轉向』(上·中·下) 思想の科学研究会 編, 平凡社 등 참조.

사상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우익들에 의해 공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¹⁵⁾ 따라서 신문은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할 때는 예컨대, ‘혁명’이나 ‘공산주의’ 등의 용어는 복자로 ○○○이나 ×××로 고치는 자위수단을 취해, 실제로 치안유지법이 개정된 1928년경부터 신문에서는 복자가 급격히 증가했다.¹⁶⁾

신문은 황실과 관련한 기사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신문과 기자들에게 황실 기사 보도는 난문이었다.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의 사회부장 출신인 아베 신노스케(阿部真之助)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신문과 기자가 권력 및 폭력에 무력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점이나 획 하나라도 오식이나 오보가 있으면 어디선가 폭력단이 와서는 신문사를 협박했다……애국 겸 폭력업자에게 경찰은 전적으로 무력했다.¹⁷⁾

애국과 폭력업자 앞에 무력했던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다. 신문 역시 이들 앞에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권력과 폭력 앞에 언론이 써야만 하는 것을 쓸 수 없게 된 결과는 무참한 것이었다. 군이 점차 권력의 중추를 장악하고, 중국에서의 이익확보가 일본의 국가적 존립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선전하며 전쟁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확대해갈 때, 이미 신문에게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문의 무기력은 권력에 의한 탄압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을 전쟁의 도탄에 몰아넣는 원인이기도 했다. 신문이 권력의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가해자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또한 신문이 갖는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이 중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5) 다카가와사건에서는 미노다 무네키(蓑田胸喜) 등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다.

16) 前坂俊之(1989) 『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 p.36.

17) 大宅壮一編(1964) 『昭和という名の元号』『阿部真之助選集』毎日新聞社, p.252.

Ⅲ. 권력에 동조하는 신문과 전쟁

공기로서의 신문의 생명은 권력에 대한 견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권력과 폭력이 맹위를 떨치던 제국일본의 전시체제는 신문이 본연의 사명을 다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국가의 물적, 인적, 정신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신문의 공평성, 객관주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국일본의 대부분의 신문은 전쟁의 확대과정에 대해 그 필연성, 정당성, 시의성 등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소홀히 하였다. 오히려 전쟁 지지를 초기부터 선언하는 등 권력에 유착하는 행태까지 노정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전시체제라는 특성이 군부의 폭주를 가능케 하였다. 거듭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군부와 군부의 강한 영향력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린 1920년대 후반 이후의 제국일본 정부는 신문지법, 치안유지법 등의 법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신문을 통제했다. 신문지법에 의하면, 신문기사금지처분은 게재금지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기사가 게재된 때는 대부분의 경우 금지처분에 처하는 시달(示達), 해당기사가 게재된 때의 사회 정세(狀勢)와 기사의 양태에 따라 금지처분에 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경고(警告), 해당기사가 게재되어도 금지처분에 처하지는 않지만 신문사의 덕의(德義)에 호소하여 게재하지 않도록 희망하는 간담(懇談) 등으로 구분되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 만주사변 등을 거치면서 시달과 경고가 남발되었다. 일례로, 만주사변의 결과 만주국이 건설된 1932년의 금지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만주사변에 관한 사항 27건, 상해사변에 관한 사항 14건, 경시청 앞 불경사건에 관한 사항 1건, 5.15사건에 관한 사항 1건, 재계 교란(攪亂)에 관한 사항 10건, 군사적 기밀에 관한 사항 7건,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관한 사항 4건 등이었다.¹⁸⁾ 이와 같이 각각의 사건에 대해 보도금지가 시달되었다. 또한 신문에 대한 검열을 위해 경찰도 인력을 확대했다. 즉, 1932년 6월 경시청에서는 특별고등과가 부로 확장되고 검열제도 검열과로 되어 경시 1, 경부 4, 경부보 4, 순사 12, 서기 1이 계원을 구성하였다. 이

18) 内務省警保局編(1981)『出版警察概観 昭和七年-昭和発禁関係資料』不二出版(龍溪書舎), p.70.

와 같이 법제도적 측면과 검열조직의 완비 속에 신문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진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특히 만주사변에 대한 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사변이 발발한 것은 1931년 9월 18일 오후 10시 25분이었고, 그로부터 약 4시간 후인 19일 오전 2시 20분경에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사카아사히신문』은 같은 날 오전 8시 40분, 3대의 자사 항공기를 특파기자, 사진반 등과 함께 현지에 파견했다. 이어 사설, 특전(特電) 등의 형식으로 만주사변을 보도해갔다. 사건 발발부터 12월말까지 사설은 54회, 특전은 3,785통이었다고 한다.¹⁹⁾ 대부분의 국민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전쟁을 접하고 있었으며 보도 프레임에 따라 전쟁을 인식해갔다는 점에서, 대규모적인 취재진의 편성과 압도적인 양의 보도는 전쟁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와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군의 작전을 용인하여 가정사실화하고, 국민의 군국열기, 배외의식을 자극해갔다.

『오사카아사히신문』의 전쟁보도 프레임도 국가중심, 군부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오사카아사히신문』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변의 발발 자체가 중국 측의 무모한 선제공격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의 응징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일본의 전적인 관심은 만주에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만주에서의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보도 프레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이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고 더욱이 수백 명 병사가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계획적 파괴행위라 할 수 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비록 만주철도가 우리의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경영 간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통로의 간선이다. 만국민의 공익옹호라는 면에서도 이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수비대가 곧바로 이를 배격수단에 나선 것은 당연한 긴급조치이다(『오사카아사히』1931년 9월 20일).

동3성 인민의 현재의 고경(苦境)을 구하기 위해 각 성에 신정권을 일으키고, 이를 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의 신독립국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전쟁의 참화를 피하고

19) 前坂俊之(1989) 『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p.82.

극동평화의 기초를 한 층 더 강고하게 하는 것인바,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만주에 독립국이 생겨나는 것을 환영할지언정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오사카아사히』 1931년 10월 1일).

전쟁이 국민의 내셔널리즘을 고무한다는 점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는 사실인데, 이러한 내셔널리즘의 고양에서 결코 신문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중대사에 직면하여 국론 통일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회의 암묵적 합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 수행의 제일선에 있는 군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기사는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과 신문인에 대한 노골적인 테러 위협을 낳았다. 실제로, 위의 인용문의 후자, 즉 다카하라 미사오(高原操)가 집필한 『오사카아사히신문』 1931년 10월 1일의 사설은 만주에서의 군의 폭주와 만주국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을 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만주사변 이전에 강력하게 군부비판을 전개해왔던 다카하라가 만주사변 발발 이후 이처럼 급변하여 만주국 독립을 용인하는 입장을 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카하라의 입장 전환은 내셔널리즘의 풍미와 불매운동의 위협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문 불매운동은 종종 신문의 군부비판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 군부, 재향군인회, 우익 등이 집단적인 실행행사를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매운동은 신문사 경영을 압박하는 효과를 냄으로써 실제로 일부 신문사에서 이러한 불매운동에 굴복하는 형태로 기존의 군부비판을 철회하고 군부지지로 돌아서거나, 군부비판 논조를 펴온 신문인을 퇴사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론(正論)을 이끌어 국가를 민주국가, 문명국가가 되게 하는 데에 일조한다는 의미의 언론보국, 문장보국(文章報國)은 마침내 국가의 언론 개입과 탄압을 정당화하고, 신문과 신문인이 권력에 동조하는 데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슬로건으로 변해버렸다. 문장보국은 쓰는 것에 의한 보국이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쓰지 않는 것, 혹은 권력층이 말하는 대로 쓰는 것에 의한 보국으로 전환되어갔다.

물론, 군의 폭주에 의한 만주사변을 비롯한 일련의 전쟁 보도 프레임이 전적으로 군부지지만을 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류 유유(桐生悠々), 기쿠다

케 룿코(菊竹六鼓), 이시바시 단산(石橋湛山) 등과 같이 군부비판으로 시종일관한 신문과 신문인도 존재한다. 군벌과 혈전의 각오²⁰⁾를 언명하는 이시바시의 만주에 대한 논조는 변함없는 군부비판으로 시종일관했다. 특히, “어떤 논자들은 만몽이 없으면 우리 국방이 위협하다고 한다. ……아시아대륙에 대한 국방선은 동해로 충분하다. 만약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정도라면 만몽을 영유해도 무익(無益)하다”는 이시바시의 입장은 그의 ‘소일본주의’²¹⁾ 사상의 진면목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무리 선정(善政)을 한다하더라도, 일본국민은 일본국민 이외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국민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갖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대도 우리나라에서 만몽문제를 논하는 자는 종종 이러한 감정의 존재를 중국인에 대해 부정하려 한다. 이것은 메이지유신 이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애국심을 고무해온 우리 국민의 너무도 자기반성을 결여한 태도가 아닌가. ……어떤 논자들은 만몽이 없으면 우리 국방이 위협하다고 한다. 만몽을 국방의 이른바 제일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영국이 국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유럽 대륙에 영토를 영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기자는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 아시아대륙에 대한 국방선은 동해로 충분하다. 만약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정도라면 만몽을 영유해도 무익(無益)하다.²²⁾

『시나노마이니치신문(信濃毎日新聞)』 주필 출신인 기류 역시 개인잡지 『타산지석(他山の石)』을 통해 군부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기류가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을 떠나게 된 것은 「간토방공대연습을 비웃는다(関東防空大演習を嗤う)」(1933년 8월 11일)에서 방공대연습이 비과학적이어서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에도 연습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맹렬히 비판한 것이 군의 심기를 거슬린 결과였다. 기류의 퇴사는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의

20) 石橋湛山(1931)『軍閥と血戰の覚悟』鴨武彦編(1996)『石橋湛山著作集』3(政治・外交論) 東洋經濟新報社, pp.181-183.

21) 일본에서의 ‘소일본주의’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나카 아키라, 강진아 역(2002) 『소일본주의: 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 소화 참조.

22) 石橋湛山(1931)『滿蒙問題解決の根本方針如何』鴨武彦編(1996)『石橋湛山著作集』3(政治・外交論) 東洋經濟新報社, pp.184-192.

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은 기류의 퇴사를 통해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기류는 퇴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잡지 『타산지석』을 창간함으로써 자신의 논조를 지속할 수 있었다. 5.15사건을 보도하는 『후쿠오카니치니치신문(福岡日日新聞)』과 동사의 편집국장 기쿠다케는 불매운동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군부비판을 계속하였다. 제국일본의 신문 가운데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후쿠오카니치니치신문』은 다름 아닌 군부비판의 논조를 지속한 데에 특이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15사건에 대한 도쿄와 오사카 등의 제 신문의 논조를 일견하고 누구라도 관취(觀取)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두려워하고, 외축(畏縮)하여 솔직하고 명백하게 자가(自家)의 소신을 발표할 수 없는 듯한 태도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만약 신문에 논평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충분히 회포(懷抱)를 피로하여 이른바 문장보국(文章報國)의 일대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좌고우면(左顧右盼), 말해야 할 바를 말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신문기자의 명예가 아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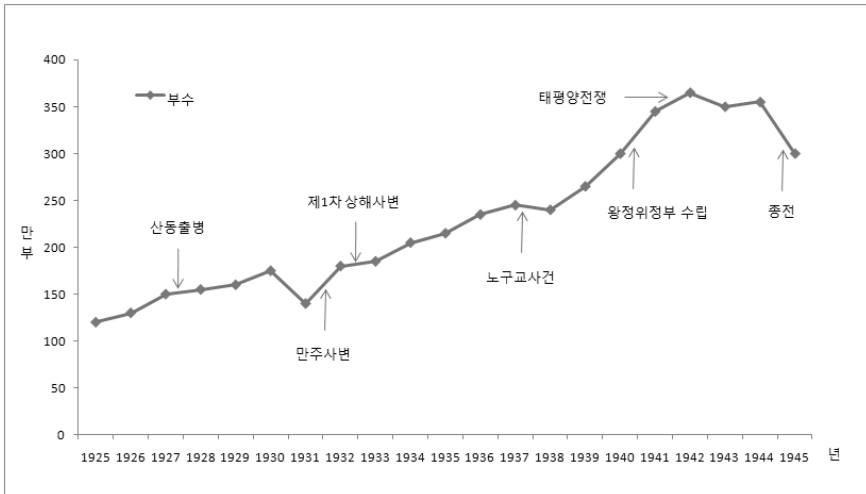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군부비판을 관철한 신문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수가 압도적으로 소수였던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류나 기쿠다케가 활동했던 『시나노마이니치신문』, 『후쿠오카니치니치신문』 등이 중소규모의 신문이었다는 사실이다.²⁴⁾ 당시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이 각 2백만 부 전후였던 데 대해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은 2만부, 『후쿠오카니치니치신문』은 17만부 정도의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이 불매운동에 굴복하고, 『후쿠오카니치니치신문』이 굴복하지 않았던 데는 이러한 부수의 차이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더해 『후쿠오카니치니치신문』의 사주(社主)는 신문편집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경영상의 전통이 불매운동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갈 수 있는 동력이었다는 설명도 설득

23) 菊竹六鼓『騷擾事件と与論』『福岡日日新聞』一九三二年五月一九日.

24) 또한, 두 신문 모두 지방지이기는 했지만, 지방지라는 특성이 언론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하나의 토대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신문이 발행한 지역이 비록 지방이기는 하지만, 다른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우익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력이 있다고 하겠다.²⁵⁾ 여하튼, 중소기업의 판매부수를 갖는 신문이 언론자유를 외치며 고군분투할 때 대규모 신문은 권력에의 동조 속에 대폭적인 사세의 확장을 가져왔다.

<그림 1> 제국일본의 전쟁과 『아사히신문』의 발행부수(1925-1945년)



출처 : 山本武利(2006) 『岩波講座『帝国日本』の学知 : 第4巻 メディアのなかの『帝国』』 岩波書店、p.3

사실, 신문에게 전쟁 발발은 부수 확대의 절호의 찬스였다. 실제로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특파원을 대량으로 현지에 파견하여 아버지나 아들, 혹은 지역 부대의 활약상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부수를 급격히 늘렸다.²⁶⁾ 예컨대, 청일전쟁을 보도, 선전하기 위해 1894년 7월부터 1895년 11월까지 66개의 신문사에서 114명의 특파원이 파견되었는데, 러일전쟁에서는 더욱 많아 116개사가 특파원을 보냈다.²⁷⁾ 만주사변 당시에는 『아사히신문』에서만 비행기 3대 이외에 60명의 특파원을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전쟁은 신문의 상업주의 내셔널리즘이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의 <그림 1>은 제국일본의 전쟁의 경과에 따른 『아사히신문』의 발행부수 확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5) 前坂俊之(1989) 『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p.171.

26) 前坂俊之(1989) 『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p.25.

27) 小林弘忠(2002) 『ニュース記事にみる日本語の近代』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p.231.

제국일본의 신문 발행부수 증가는 신문 논조를 권력에 동조시키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제도와 검열기구가 완비되고 군이 국가 운영의 전면에 등장하여 국가목표로서 전쟁을 수행해가는 가운데, 언론은 자기 검열을 하는 한편으로 전쟁 상황보도에 대한 센세이셔널한 속보뉴스보도를 통해 다수의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력충돌이 있는 후에는 반드시 발행부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전쟁보도는 속보성은 뛰어날 수 있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거듭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만주사변, 상해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제국일본 후반기의 일련의 전쟁 과정에 대한 신문의 보도에는 그러한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문의 전쟁보도는 전쟁에 대한 정보를 군의 발표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미화하고 국민의 애국적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기조차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신문은 전쟁보도를 모아 박람회나 전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쟁 열기, 군국 열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38년 중일전쟁 성전박람회(『오사카아사히신문』), 전쟁미술전람회(『도쿄아사히신문』) 개최 등이 그것이다. 만주사변 당시의 『오사카아사히신문』은 “만주에 주둔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본사에서 위문금 1만 엔, 위문 상자 2만 개를 보냈다”는 사고(社告)를 게재²⁸⁾하였고, 1931년 11월 15일에는 『만몽의 올바른 지식(滿蒙の正しい知識)』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독자에게 배포하였다. 나아가 1937년 7월에는 군용비행기헌납운동을 사고(社告)에 게재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군과 신문의 협력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신문은 더 이상 언론기관이 아니라 군의 선전기관으로서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8) 『大阪朝日新聞』一九三一年十月十六日.

IV. 맺음말

제국일본의 전시체제는 군부가 정치체제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국가목표로서 설정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였다. 전쟁의 수행은 무엇보다도 국론의 통일에 의한 국내로부터의 전면적인 지지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제국일본의 군과 권력은 이러한 국가목표로서의 전쟁 수행을 위해 전시체제를 편성하였고, 당연한 귀결로서 신문에 대한 강제와 탄압이 가해졌다. 전시체제를 주도하는 군부의 언론간섭이 강화되고 신문지법,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으로 국체사상이 유일사상이 되고, 나아가 특고 등에 의한 검열기구가 완비된 이래, 신문은 공기(公器)로서의 위상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군과 황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법적으로 금기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신문 스스로에 의해 규제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 관계 기사는 군부 관계자에 대한 인물평가 기사가 특히 잡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전반적으로 군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가 주류를 이루어갔다.

전시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신문에는 국가이상의 전파자로서의 역할만이 남게 되었다. 일부 중소규모의 신문이 전쟁과 군에 대한 비판을 마지막까지 견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신문은 전정보도를 통해 발행부수를 비약적으로 확대해 갔다. 그러나 신문의 발행부수 증대는 신문이 권력에 동조한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다. 권력에게 있어서 신문의 언론자유는 써야 하는 것, 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었다. 권력에 동조하는 한에서의 언론자유였다. 권력에 동조하는 속에서 신문 발행은 비로소 가능했으며, 기사 역시 게재될 수 있었다. 기류나 기쿠다케와 같은 반권력적 신문인도 존재하였지만, 주요 신문의 경우 국가권력에 동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권력에 편승하여 전쟁을 보도함에 즈음해서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논조를 유지하는 것, 그러한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였다. 이러한 가운데 ‘문장보국’이라는 슬로건은 참으로 편리한 용어였다. 권력은 언론을 강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신문과 신문인은 선전기관으로 하락한 자신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각각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문은 메이지 초기의 ‘신문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신문의 공포시대’를 거쳐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 ‘신문의 권력 동조기’로 변모해갔다.

신문과 전쟁의 문제는 오래되었으면서도 새로운 문제이다. 『아사히신문』은 1945년 11월 7일 ‘국민과 함께’라는 사고(社告)를 게재한데 이어 1986년 9월 11일부터 4회에 걸쳐 하타 쇼류(秦正流)가 집필한 『전쟁과 신문(戦争と新聞)』을 게재하여 만주사변부터 패전까지의 신문의 패배의 역사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2007년 4월 2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1년간 『신문과 전쟁(新聞と戦争)』을 연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군이 국가목표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신문은 권력에 동조하는 형태로 내셔널리즘을 고양함으로써 비약적인 발행부수 증대를 가져왔으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전쟁의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으로부터의 피해자 측면을 넘어 독자인 일반 국민에 대한 가해자 측면에서의 신문의 전쟁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다나카 아키라, 강진아 역(2002) 『소일본주의 : 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 소화.
- 송석원(2007) 『일본에 있어서의 전향(轉向)의 정치학 : 그 유형과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제11권 2호), 국제지역학회, pp.674-697.
- _____ (2010) 『신문에서 보는 제국일본의 국가이상 : 메이지 시대를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제31호), 현대일본학회, pp.147-149.
- 전상숙(2005) 『일제 파시즘기 사상통제정책과 전향』 『한국정치학회보』(39집 3호), 한국정치학회.
- 혼다 슈우고(1993) 『전향문학론』 『1930년대 문학연구』 평민사.
- 朝日新聞『新聞と戦争』取材班(2008) 『新聞と戦争』朝日新聞出版、pp.577-580.
- 石橋湛山(1931) 『軍閥と血戦の覚悟』鴨武彦編(1996) 『石橋湛山著作集』3(政治・外交論) 東洋經濟新報社、pp.181-183.
- _____ (1931) 『滿蒙問題解決の根本方針如何』鴨武彦編(1996) 『石橋湛山著作集』3(政治・外交論) 東洋經濟新報社、pp.184-192.

- 磯田光一(1968) 『増補 比較転向論序説 : ロマン主義の精神形態』勁草書房.
- 荻野富士夫(2000) 『思想検事』岩波書店、pp.133-178.
- 大宅壮一編(1964) 『昭和という名の元号』『阿部真之助選集』毎日新聞社、p.252.
- 小林弘忠(2002) 『ニュース記事にみる日本語の近代』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p.231.
- 鶴見俊輔(1959, 1960, 1962) 『共同研究 転向』(上・中・下) 思想の科学研究会 編、平凡社.
- 電通編(1955) 『五十人の新聞人』電通、pp.206-207.
- 内務省警保局編(1981) 『出版警察概観 昭和七年-昭和発禁関係資料』不二出版(龍溪書舎)、
p.70.
- 永嶺重敏(2004) 『<読書国民>の誕生 : 明治30年代の活字メディアと読書文化』日本エディ
タースクール出版部.
- 前坂俊之(1989) 『兵は凶器なり-戦争と新聞 1926-1935』社会思想社、p.22.
- _____ (2007) 『太平洋戦争と新聞』講談社、p.35.
- 山本武利(2006) 『岩波講座「帝国日本」の学知 : 第4巻 メディアのなかの「帝国」』岩波書
店、p.3.
- 吉本隆明(1958) 『転向論』『吉本隆明全著作集 13』勁草書房.
- 陸軍省新聞班編(1934) 『国防の本意と其の強化の提唱』陸軍省新聞班.

Anderson, Benedict(1983)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Gellner, Ernest(1983)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 ❖ 투고일 : 2011.06.30
- ❖ 심사일 : 2011.07.26
- ❖ 심사완료일 : 2011.07.28